

시장친화적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방안

2009. 5. 27.

노동부 · 기획재정부 · 교육과학기술부 · 지식경제부 · 여
성부 · 중소기업청 ·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

순 서

I. 추진배경	1
II. 현황 및 문제점	2
1. 현 황	
2. 문제점	
3. 선진국 사례	
III. 비전 및 추진전략	7
IV. 주요 정책과제	8
1. 훈련참여자의 선택권 강화	
2. 산업계와 지역의 참여 확대	
3. 현장중심 능력개발 촉진	
4.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체계적 관리	
V. 기대효과 및 실천계획	23

I 추진 배경

- ① 글로벌 경제위기를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의 중요성 증가
 - 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의 고용, 나아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고
 - 위기극복이후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직업능력개발 강화
- ② '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직업능력개발 투자 지속 확대
 - * '02년 7,655억원 → '09년 17,805억원
- ③ 그러나, 현행 직업능력개발체제는 여전히 정부주도의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질적 측면의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
 - 정부가 훈련물량을 훈련기관에 배정하는 전달체계로 인해 급격한 기술변화 등 산업수요 변화에 대응하는데 한계
 - 훈련상담, 훈련정보 제공이 미흡하고 훈련시장도 성숙되지 않아 수요자의 선택권 제약
 - 기관(중앙정부·지자체)에서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지원대상이 중복되는 등 재정투자의 효율성 저하

- ◆ 공급자 중심의 현행 직업능력개발체제를 시장진화적*으로 획기적으로 개편
- * 훈련시장에서 기업·근로자·산업계의 수요에 따라 직업훈련의 양과 질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체제
 - 노동시장 유연화를 지원하고 고숙련 인적자본의 축적으로 노동생산성 향상 및 이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 견인

II 현황 및 문제점

1 현황

① 훈련대상 및 실시 현황('09년)

- 직업훈련의 주요 대상은 취업준비자, 재직근로자 및 실업자 등이며, 대상에 따라 훈련 실시기관·지원 방식 등이 다양
- (취업준비자) 정부 소속 공공훈련기관*에서 직접 실시하고, 제조업 기간산업 분야 위주의 산업인력 양성(취업률 70% 수준)
 - * 공공훈련기관 : 노동부 폴리텍대학, 지자체 직업훈련시설 등
- (재직근로자) 정부가 인정한 훈련과정을 사업주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하고,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지원(참여율 40% 수준)
- (실업자) 정부가 훈련기관에 훈련물량을 배정하여 훈련 실시하고,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(취업률 60% 수준)
 - * 서비스업과 사무관리 분야의 비중이 높음

< 훈련대상별 실시 현황('09.4월 기준) >

정규교육 단계	노동시장 진입단계	노동시장 활동단계	
		재직시기	실업시기
비진학청소년 54천명	청년실업자 348천명 (취업준비자 훈련 : 37천명)	근로자 9,480천명 (재직근로자 훈련 : 4,197천명)	실업자 933천명 비경활자10,053천명 (재취업 훈련 : 173천명)

② 중앙정부·지자체별 지원 현황

- (총괄) '09년 중앙정부,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총 111개, 1.8조원 규모(노동부 92.6%)
- (중앙정부) 노동부, 중소기업청, 여성부는 특정산업에 한정되지 않고 실업자·근로자 대상 사업을 실시
 - 지식경제부,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소관 산업별 특화 사업 실시

< 중앙정부 직업능력개발사업 현황(억원, 개) >

연도	구분	노동부	지경부	문광부	여성부	중기청	환경부	기타	합계
2009	예산	16,079 (92.6)	390 (2.2)	219 (1.3)	196 (1.1)	170 (1.0)	87 (0.5)	232 (1.3)	17,373 (100)
	사업수	13 (21.7)	4 (6.7)	14 (23.3)	2 (3.3)	2 (3.3)	10 (16.7)	15 (25.0)	60 (100)

* 註) 괄호안은 비중(%)

- (지자체) '09년 예산은 총 432억원으로서 재정여건이 양호한 서울, 경기도가 전체 사업재원의 83%를 차지
 - 지역 특화산업에 대한 인력 공급 기능도 수행하나,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적 차원의 직업훈련 위주(전체의 85%)로 시행

<그간의 정책 추진과정 및 목표>

- ◆ '70~'90년대 중반
 - 직업훈련 의무제도 도입 : 제조업의 기능인력 양성
 - * 제조업 등 6개 산업분야에 훈련의무제 도입(훈련실시와 분담금 납부 중 선택)
- ◆ '95년대 중반 이후
 - 고용보험제도로 전환 : 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 강화
- ◆ 2000년대 중반 이후
 - 『평생직업능력개발』 체계 구축 : 생애 전 단계에 걸친 직업능력개발 지원 촉진

2 문제점

① (운영시스템) 훈련기관, 정부 등 공급자 중심의 운영

- 정부가 훈련직종·인원을 결정하고 훈련기관에 배정하여 훈련을 실시
 - 훈련참여자의 선택권 제약으로 성과 제고에 한계
- 직업능력개발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 산업계와 지역의 참여 기회 부족
 - 정부의 중앙집중식 운영으로 산업별·지역별 수요 반영 미흡
- 훈련수요자가 최적의 훈련프로그램을 찾는 데 필요한 훈련 상담 미비
 - 고용지원센터의 훈련 상담 인력이 부족하여 만족도 낮음<'08년 3.75(5점 척도)>

② (훈련시장) 신규 진입의 어려움 등으로 경쟁 촉진 미흡

- 훈련시장에 대한 행정규제로 대학 등 신규기관 참여 미흡
 - * 실업자훈련 참여 현황('08년) : 지정 훈련기관(노동부) 73.0%, 기술계 학원 20%, 평생교육시설 1.8%, 대학 0.5% 등
 - 지정 훈련기관*은 영세하고 담당 인력의 전문성도 떨어져 수요자가 요구하는 서비스 제공에 한계
 - * 종사자 10인 미만 48.3%, 자본금 5억원 이하 52.7%(직업능력개발원, '06년)
- 훈련생 모집과 훈련실시가 용이한 훈련과정 개설로 훈련 직종 편중
 - * 민간훈련 중 음식·이미용 등 단순서비스·사무관리 분야 비중 43%('08년)

③ (훈련내용) 집체훈련 위주의 지원으로 중소기업 참여 저조

○ 기업은 현장중심 능력개발에 대한 선호가 높으나, 현장훈련에 대한 엄격한 요건과 낮은 지원으로 활성화 한계

-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학습요구 반영 미흡

* 훈련비 지원 현황 : 집체훈련 65.1%, 원격훈련 34.5%, 현장훈련 0.4%

○ 특히, 인력여유가 없는 중소기업은 생산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 현장훈련을 선호*하는데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어

* 중소기업의 훈련방법 선호도('07년, 중기연) : 현장훈련 4.08, 집체훈련 3.69<5점 척도>

-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능력개발 참여 격차의 원인으로 작용

* '08년 기업규모별 참여율(참여 연인원/근로자수) : 대기업(1,000인 이상) 124.7%, 중견기업(300~999인) 63.5%, 중소기업(300인 미만) 21.5%

4) (지원체계)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체계적 관리 미흡

○ 직업능력개발이 부처별·지자체별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으나,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부재

* 각 부처 사업간 지원대상이 중복되거나, 유사·중복사업이 실시되어 재정투자의 비효율성 우려

○ 훈련기관·훈련과정별 성과(취업률, 만족도 등)에 대한 평가와 이에 관한 정보 제공 미흡

- 정부의 훈련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그 결과를 공개하는 피드백(Feedback) 시스템이 미비하여 관성적으로 예산 지원

- 훈련성과 보다는 과장광고 등에 의해 훈련기관 선택 우려

○ 『훈련비용 환급 절차』가 복잡하여 사업주의 행정부담 과다

- 훈련비용을 지원받기 위한 제출서류가 20종이며, 훈련종료 후 비용환급까지 30일 이상 소요

◆ 인력투자법(Workforce Investment Act, '98년)에 따라 개인훈련계좌제 도입

미국

○ 훈련정보, 평가결과 등을 공개, 수요자 선택권 확대 및 시장 경쟁 촉진

* 훈련정보시스템(CRS, Consumer Report System)에 훈련기관 및 평가결과 등 공개

○ 훈련상담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훈련을 줄이고 취업성과 제고

◆ 현장중심 능력개발로 기업의 경쟁력 제고

영국

○ 능력개발전문가(Skill Broker)를 활용한 기업의 현장중심 능력개발 확산(Train to Gain)

○ 직업능력개발정책에 대한 산업계의 권한 강화

* 사용자의 참여와 투자촉진을 위해 산업별협의체의 역할 강화

◆ 수요자가 주도하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능력개발 지원

네덜란드

○ 산업별훈련기금(O&O Fund)이 주도하고, 정부는 시장 조정자(Market facilitator) 역할 담당

○ 고용주와 노동조합의 파트너십에 의한 직업훈련 실시

* 노사가 단체협약에서 직업훈련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, 최근에는 현장학습 중시 경향

◆ 선진국은 기업·개인 등 수요자 주도의 능력개발 활성화로 민간의 자율적 시장경쟁을 촉진하는데 주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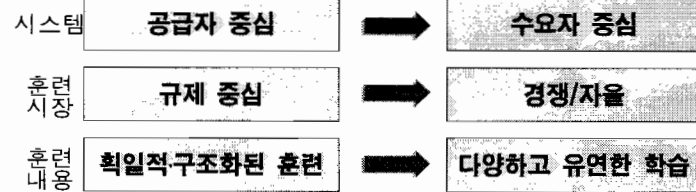
⇒ 기업·개인의 경쟁력 제고와 직결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 구축 도모

III 비전 및 추진전략

기업과 근로자의 경쟁력 제고

기업이 만족하고 취업에 강한 직업훈련

- 참여기업 비율 : '08년 43% → '13년 53%
- 실업자훈련 취업률 : '08년 63% → '13년 73%



- 1] 훈련참여자의 선택권 강화
- 2] 산업계와 지역의 참여 확대
- 3] 현장중심 능력개발 촉진
- 4]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체계적 관리

IV 정책 과제

1 훈련참여자의 선택권 강화

가. 현황 및 정책방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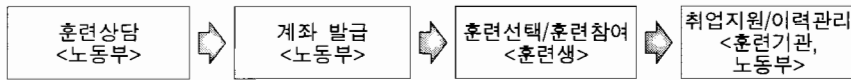
- (현황) 직업훈련 전달체계는 정부가 훈련기관에 물량을 배정하고 훈련기관이 훈련생을 모집하는 Top-down 방식이 중심
 - 훈련비용 기준단가에 따른 지원방식과 결합되어 저품질 훈련과정 많고, 고급과정 운영기관의 참여 미흡
 - 훈련이 본인 부담 없이 제공됨에 따라 훈련성과 제고에 한계
- (정책방향) 정부가 제공하는 훈련에 익숙한 실업자 등에 대해 자율·책임을 강화하고
 - 훈련시장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여 훈련기관간 경쟁을 촉진하되, 훈련성과 평가와 훈련상담 강화로 수요자의 합리적 선택 지원

나. 주요 과제

1] 직업능력개발 계좌제의 전면 확대

- 정부가 일방적으로 훈련을 공급하는 체계를 개편하여 수요자의 주도적인 선택과 책임을 강화하는 『직업능력개발 계좌제』 시행
 - * 시범사업 실시 : 1,314개 훈련기관에서 4,809개 훈련과정 선정('09) : 훈련기관 참여도 증가(정부 주도 방식에 비해 훈련과정수 2.2배 증가)
 - * '08.9월 이후 61,231명에게 계좌 발급, 수요자의 만족도 상승(계좌제 4.12, 기존훈련 3.96),

<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절차도 >



- (훈련생) 훈련생이 과정을 자유롭게 선택하되, 훈련비의 일부를 부담(20%)하게 하여 무료 훈련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방지
- (훈련기관) 정해진 물량이 아닌 수요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훈련 운영 가능
- (정 부) 훈련 상담 강화 등을 통해 꼭 필요한 훈련에 참여토록 유도

○ 시범사업 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

- 훈련참여자에 대한 자율·책임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훈련시장의 확대를 통한 시장 경쟁 도모

<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확대 계획 >

1단계('09)	2단계('10)	3단계('11)
실업자 (시범사업)	실업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	중소기업 근로자

○ 중장기적으로 전 부처 사업 중에서 개인의 훈련 선택권이 요구되는 사업은 계좌제로 전환

② 훈련시장의 경쟁 촉진

- 훈련과정에 대한 규제*를 완화하고 훈련비 지원방식을 유연화 하여 대학 등의 참여를 촉진('10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 개정)
 - * 훈련인원(학급당 정원 60명이내), 훈련시간(2일 16시간 이상) 등
- 고품질 훈련프로그램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실제 훈련비용 지원 방식 등 확대
- 직업능력개발 계좌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요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는 정보제공 필수

- 훈련기관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체계를 정비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 강화

< 훈련기관 평가 개선(안) >

구분	현행	개선안
평가목적	차년도 훈련물량 배정	수요자의 합리적 선택 지원
평가요소	훈련실시능력 중심	훈련성과 중심

* '09년 연구용역 추진(평가방식, 평가지표 개발), '10년부터 시범 실시

③ 훈련 상담 등 강화

- 수요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고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해 훈련 상담 강화
 - 상담인력을 확충하고, 상담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프로그램 운영(매년 2회 이상, '10년 실시)
 - 효율적인 상담을 위한 업무프로세스 설계 및 성공적인 상담을 위한 매뉴얼 작성('10년 관련 규정 마련)
- 훈련 상담을 강화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 강화
 - 비정규직 근로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말·단기의 고급훈련과정을 신규 보급('09년 150억, 5만명)
 - 자영업자의 전직을 촉진하기 위해 수준별·단계별 직업훈련 서비스 강화('09년 21억, 1,198명)
- ④ 직업교육훈련 콘텐츠 유통 활성화
 - 『직업능력개발 지식포털』 사이트 구축

2 산업계와 지역의 참여 확대

가. 현황 및 정책방향

- (현황) 직업능력개발정책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기업 등의 참여 기회 부족
 - 그간 정부 주도 중앙집중식 운영으로 기업 등 수요자의 참여가 미흡하고 지역의 수요 반영에 한계 노정
- (정책방향) 산업별·지역별로 직업능력개발체제를 분권화하여 노사단체의 직업능력개발정책 참여와 사업 수행을 강화

나. 주요 과제

1] 산업별 협의체(Sector Council)의 인적자원개발 역할 강화

- 정부의 중앙집중식 운영에서 탈피하여 산업계가 주도하는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산업별 협의체(SC)* 구성·운영
 - * SC는 산업별단체·교육훈련기관·전문기관으로 구성
 - * '08년 기계·전자 등 10개의 SC가 운영중이며, 3만여개 기업체가 참여
 - SC를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산업 분야로 확대하고, 구성·운영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대표성 강화
 - * '09년 하반기 『SC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지침』 제정
- SC의 인적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
 - 산업별 인력부족 실태, 훈련수요 등을 조사·분석하고 산업별로 특화된 훈련 실시('08년 93억원→'09년 136억원)
 - SC에 출제기준 결정·변경 권한을 부여하여 국가기술자격 운영능력 배양

2] 지역별 수요에 부응하는 직업능력개발 활성화

- 다양한 형식의 직업교육훈련 콘텐츠(Text, e-Learning, 동영상, e-Book, 애니메이션 등)가 축적·유통될 수 있도록 지원
 - * 사이트 구축('09년 하반기) → 시범 운영('10년 상반기)
- 수요자와 공급자간 교육훈련 콘텐츠를 사고팔 수 있는 전자 상거래 지원
 - * 수요자의 콘텐츠 만족도 등을 공개하여 공정거래 유도
 - "직업훈련사업"을 유망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는 기반으로 활용

〈 직업능력개발 지식포털 체계도 〉



○ (지역 훈련기관) 녹색산업과 고부가가치산업 등에 대한 인력 공급을 위해 지역 훈련기관 역할 강화

- 지역 거점 공공훈련기관인 폴리텍대학(38개 캠퍼스)은 신성장동력산업 인력양성 역할 강화('13년까지 총 65개 학과 개편)
- * '09년 에너지·환경(3개), 수송시스템(1개), 뉴IT(3개), 융합신산업(3개), 지식서비스(3개) 등 학과 개편(131억원, 590명 훈련 지원)

< 폴리텍대학 특별훈련과정 >

- 폴리텍대학 4개 캠퍼스*에 디스플레이 인쇄 등 신성장동력 분야 4개 훈련직종을 개발('08.12), 고학력 실업자를 위한 특별훈련 실시
- * 남인천 : 출판인쇄 → 디스플레이인쇄, 원주 : CNC선반 → 의료기기제작, 충주 : 전기제어 → 태양광설비제어, 광주 : 멀티미디어 → 광고디자인
- ⇒ '09년 115명이 훈련 중에 있으며, 이중 고학력자는 55명으로 48% 차지

- 정부위탁 우선선정직종훈련(78개 직종, 101개 훈련기관 참여)을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직종으로 전환('09년 10% → '12년 15%)
- * 엔지니어링 서비스업, 디자인 기획 등

○ (대한상의) 정부가 지정한 훈련기관인 『대한상의 인력개발원』*을 지역 중소기업 훈련수요에 부응하는 기관으로 전환

- * '94. 4월 「신경제 5개년 계획」에 의해 산업인력공단의 □공동 직업훈련원 8개소를 대한상의로 이관
- '09년 부산지역 등 2개소 시범실시 후 단계적으로 확대

현행	개선안
정부 물량 배정	회원사 수요조사 후 훈련과정 개발
학교형 산업인력 양성 (훈련과정 2년제)	기업·지역 맞춤형 훈련

○ (노사단체) 지역단위 노사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별 직업능력개

발 수요에 대응

- 민간에서 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직종(건설·봉제업 등)을 대상으로 『노사공동훈련사업』 활성화<'08년 19억원 → '09년 40억원>

<한국노총 대구경북 건설현장 노동조합 - (주) 진솔건설>

- 노사 파트너십을 통해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실습재료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주 지원을 받아 훈련 실시('08년 107백만원, 120명 훈련 지원)
- ⇒ 훈련수료 후, 임금상승(29%), 정규직 전환(4%) 등 효과 발생

○ (대기업·협력업체) 대기업·협력업체 등 지역단위 직업능력개발 활성화를 위해 『중소기업 훈련컨소시엄사업』 실시

- * '08년 현재 83개 운영기관에 대해 702억원 지원(24천개 중소기업에서 28만명 훈련 참여)
- * 주요 지원내용 : 시설·장비비(3년간 매년 최대 15억원), 전담인력 인건비(6년간 매년 최대 1.2억원) 지원 등
- 특히, 대기업·협력업체가 공동으로 훈련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대학과 함께 훈련을 실시하는 『직업능력개발 중심대학 모델』 확산('08년 11개소 → '10년 15개소)
- * 대기업·협력업체간 훈련컨소시엄이 활발하지 않은 업종(섬유, 유통, 물류, 기계 등) 중심으로 타겟팅 홍보를 통한 참여 유도

가. 현황 및 정책방향

- (현황) 대기업은 선진국 수준으로 능력개발을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반해, 중소기업은 참여가 부족한 실정
 - 특히, 공급자가 선호하는 집체훈련 위주의 지원은 중소기업 여건에 맞지 않아 중소기업 참여율 저조의 원인
 - * 중소기업의 집체훈련 활성화를 위해 훈련비 지원율 인상 등 제도개선을 하였으나, 성과를 거두지 못함
- (정책 방향) 중소기업이 선호하는 현장중심 능력개발 활성화로 중소기업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강화
 -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중심 능력개발 지원 확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직업능력개발 참여율 격차 해소

< 집체훈련과 현장중심 능력개발 비교 >

구분	집체훈련	현장중심 능력개발
지원대상	근로자 단위	사업장 단위
지원내용	범용성 직무능력 개발	사업장에 특화된 숙련기술
지원효과	개인의 경쟁력 향상에 주력 * 우수인력 유출 우려로 중소기업주 기피	사업장의 경쟁력 향상에 주력 * 인력 유출 우려가 없어 기업주 선호

나. 주요 과제

① 사업장에서 직접 실시하는 현장훈련 활성화

- 현장훈련의 요건을 완화하고, 현장훈련에 대한 고용보험 환급기준을 상향 조정('09년 하반기 고용보험법령 개정)

< 현장훈련 개선(안) >

구분	현행	개선안
훈련요건	1일 8시간이상 집체훈련 후, 현장훈련 실시	집체훈련 없이 현장훈련 가능
훈련비 지원	훈련비 지원단가의 40%	50%

② 현장중심 능력개발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육성

- 기능명장, 품질명장 등을 사업장의 현장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『전문 컨설턴트(Skill Broker)』로 양성('10년부터 매년 100명)
 - * 기능명장(463명, 노동부) : 최고의 기능인을 대상으로 선정
 - * 품질명장(1,350명, 지경부) : 최고의 현장 전문 근로자를 대상으로 선정
- 노동부(HRD-net)와 중기청(Bizinfo) 등에 접수된 중소기업 현장 문제해결 지원
- 사내 고속연자를 현장 전문가로 육성하여 사업장 혁신(Innovation) 등을 선도
 - * 현장 전문가를 “사내강사” 등으로 활용하고, 이를 훈련비용으로 환산하여 지원('10년 시범사업 실시)
- 『중소기업훈련권소사업』 전담자를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컨설턴트로 육성하기 위한 “직무역량 제고 프로그램” 개발·보급(한국기술교육대학교, '09년 하반기)

③ 중소기업의 직장내 학습지원 강화

- '06년 중소기업의 자율적 능력개발을 촉진하는 핵심 모델로 『중소기업 학습조직화사업』 도입
 - * 노사간 협력을 기반으로 “직장내 학습공간 구축”, “OJT 프로그램 개발”, “팀학습 지원” 등 7개 학습유형을 구축, 기업여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
- 그간 중소기업의 적극적 참여로 짧은 시행기간 동안 상당한 성

과를 거양<'09년 120개 모집에 350개 업체 지원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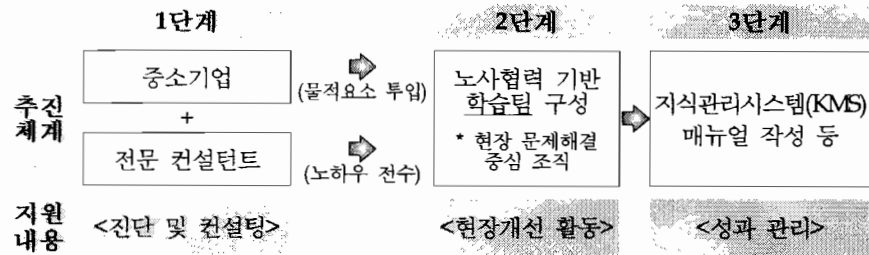
- * 중소기업 학습조직화사업 효과 : 산재사고 감소(0.34건 → 0.2건), 불량률(2.06% → 0.95%), 1인당 기업 자체 훈련투자(26만원 → 58만원)

○ 그간의 운영을 통해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『학습조직화』 모델을 구축하여 확산 <08년 280개소 → '12년 1000개소>

- 동 사업에 대한 내실있는 성과 관리를 위해 사업과정보다는 사업결과(생산성 향상, 원가절감 등)에 대한 평가 중시

- * 사업 평가를 기준으로 차년도 지원여부 등을 결정하는 성과관리제 도입

< 한국형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모델 >



< (주) 영진 >

- 현장학습 지원을 위해 학습팀 도입(5개 학습팀 구성·운영)
 -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팀학습 실시(생산설비 이해, 품질개선, 안전보건 개선 등)
 - 지식경영시스템(KMS)·학습리더, 학습공간 등 구축
- ⇒ (3년 후) 노사갈등 요인인 “공장자동화” 문제 해결, 원청업체 평가점수 향상(3.5점 → 5점), 연구개발 등 지원 강화, 이직자수 감소(49명 → 10명)

가. 현황 및 정책방향

○ (현황) 중앙부처 등이 각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, 전반적인 인프라가 미비하여 비효율 야기

- 수요자가 전체 훈련과정을 파악하기 곤란하고, 훈련과정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Feedback 시스템이 미흡
- 일부 사업이 유사하여 중복 우려가 있고,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역할이 혼재되어 있으며, 민간에 대한 지원절차가 복잡함

○ (정책방향) 정부의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적·체계적 관리를 위해 『직업능력개발 통합 정보관리시스템』 구축

-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,
- 유사사업 통폐합과 중앙정부·지자체간 합리적 역할 분담방안 등을 마련하며
- 기업 등 민간에 대한 지원절차 간소화 추진

나. 주요 과제

1] 직업능력개발 통합 정보관리시스템 구축('09 하반기)

○ 노동부 직업훈련 정보망(HRD-net)을 정부의 직업능력개발사업 포털(Portal)로 개편하여 각 부처와 공동이용

- 현재 HRD-net은 노동부, 지자체 등의 행정업무 서비스를 제공하고, 훈련수요자에게 훈련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

* HRD-net : 직업훈련 홈페이지(훈련과정 정보 제공), 직업훈련 행정 정보망(행정업무 처리 지원) 구축으로

- 월 평균 접속건수 1,020천건, 등록 훈련과정수 123천개, 등록 훈련기관수 7,235개소 등 참여

○ 각 부처 사업의 통합 정보관리시스템 등재 및 평가 의무화를 위해 해당 내용의 입법화 추진<'09 하반기>

* '09년 구축한 각 부처 일자리 사업 통합관리시스템(일모아 시스템)도 각 부처의 사업 등재가 미흡하여 관련 법령으로 입법화 추진 중

○ 각 부처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 업무와 출결관리 등 **훈련과정 관리 업무** 등 지원

- 모든 사업 시행기관은 **훈련 상세정보**를 게시하여 상호 비교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**수요자의 훈련선택 편의 제공**
- 훈련생의 지원내역 등 이력관리를 통해 **중복 수혜를 방지**하고, 취업지원시 활용

② **직업능력개발사업 평가 및 조정 강화('10년 시행)**

○ 직업능력개발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*을 『**직업능력개발평가센터**』로 지정

-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『**고용정책심의회**』를 통해 『**직업능력개발평가센터**』의 지정과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 심의·결정

* 직업능력개발원, 한국기술교육대, 산업인력공단 등 전문기관 중 1개소

○ HRD-net에 등록된 훈련기관(노동부 + 타부처) 및 훈련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공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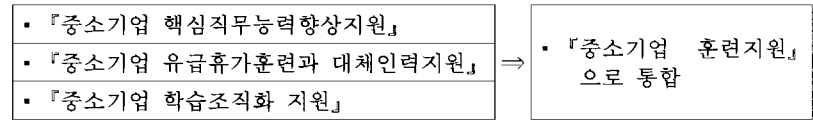
- 노동부 실업자훈련 사업의 경우 최하위 등급시 다음해 **훈련과정 인정정 배제**
- 타부처 사업도 평가결과를 다음해 **재정 지원 기준** 등으로 활용

③ **유사 사업의 통폐합 추진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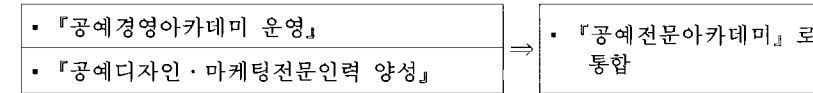
① 각 부처내 유사사업은 자율적 통폐합 실시(각 부처)

('09년 하반기부터 시행 가능한 부분 실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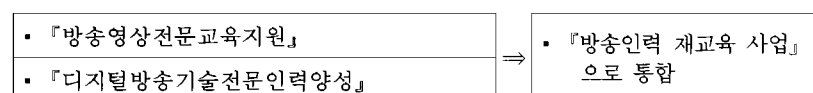
< 노동부 사업 >



< 문화부 사업 >



< 방통위 사업 >



② 성과·중복여부 등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전 부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**통폐합 추진('09년 하반기)**

○ 관계부처로 구성된 『**직업능력개발사업 조정 협의체**』 운영 ('09.6월, 국무총리실 주관)



- 전문인력 양성이 아닌 일반적인 실직자·근로자 직업훈련 차원의 유사 중복가능성이 높은 직능사업(여성부, 중기청, 교과부 등)에 대해서 우선 평가하고, 이를 심의하여 **통폐합 추진**

* 여성실업자훈련(노동부), 여성직업훈련(여성부)의 사업대상(경력단절여성) 및 훈련기관 유사성 검토

* 실업자훈련(노동부), 인력채용패키지사업(중기청)의 사업대상(실업자) 및 훈련기관 유사성 검토

○ 그 외 전 부처 직업훈련사업도 추가로 평가하여 통폐합 추진

- 다만, 각 부처의 사업이 통합되더라도 **직업훈련 이외의 보완적인 지원 사업은 직업훈련 성과제고 차원에서 필요시 각 부처가 지속 추진하는 방안 검토**
- 평가·통폐합 등 절차 조속히 완료, 그 결과를 '10년 예산에 반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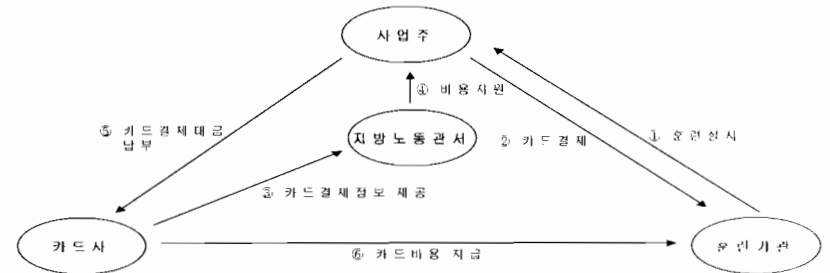
[4] 중앙정부·지자체간 역할 분담('09년 하반기)

- 중앙정부·지자체간 **합리적인 역할 분담**으로 중복사업에 따른 비효율을 방지하고, 사업간 연계로 시너지 효과 제고
- (지자체) 취약계층 중심훈련에서 지역 전략산업 중간기술인력 양성으로 기능 전환 추진
 - 『5+2 광역경제권별 선도사업』* 인력양성 프로젝트**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**지자체의 산업인력 양성 역할 강화**
 - * 수도권 : 지식정보산업, 충청권 : 의약바이오, 무선통신 등, 호남권 : 신재생에너지 등, 제주권 : 관광레저 등, 동남권 : 수송기계, 융합부품소재 등, 대경권 : 그린에너지 등, 강원권 : 의료관광 등
 - ** 노동부·지자체의 『지역실업자 훈련 사업(사업비 156억원)』을 『지역 전략 산업 인력양성 사업』으로 우선 전환
 - 지역별 적정한 인력 양성을 위해 인력수요 조사 후 훈련 실시('09년 하반기)
- 지자체의 복지지원시스템과 중앙정부의 고용지원사업간 연계 강화로 취약계층 등에 대한 훈련 지원 확대
 - 지자체가 지역 취약계층 중심으로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발급대상을 적극 발굴
- (중앙정부) 국가 고용지원서비스 지원체제를 통해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시행 강화
 - 계좌제를 통해 취약계층 등에 대한 통합적 고용지원 강화

[5] 훈련비용 지원 절차 간소화('10년 상반기)

- 훈련비용 지원 관련 각종 증빙서류를 **On-Line**으로 제출토록 하여
 - 기업의 직접 방문(훈련실시 1건당 평균 3회)에 따른 불편 해소
 - * On-Line이 곤란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기업이 제출토록 하는 대신에 보존(전자적 서류 가능)토록 전환
- 훈련비용 지원절차를 간소화 하여 훈련비용 지급 처리기간 단축
 - <현행 : 30일> : 훈련과정인정 → 훈련실시신고 → 수료자보고 → 훈련비지원신청
 - <개선 : 10일> : 훈련과정인정 → 훈련실시신고 → 훈련비지원신청
- 사업주가 하던 훈련비 지원신청을 **훈련기관에서 대행**토록 하여
 - 훈련비용 처리업무 전담인력이 없는 중소기업 등의 애로사항 해결
- 『**훈련비용 법인카드 결제시스템**』 도입*으로 기업이 경제적 부담 없이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
 - * 사업주가 카드 결제 후 카드대금 납부일 이전에 훈련비용 지원(신용카드 회사의 전산망과 직업훈련 정보망(HRD-net)을 연계)

< 법인카드를 활용한 훈련비용 지원 업무 프로세스 >



V

기대 효과 및 실천계획

1

기대 효과

- ◆ 우수한 산업인력 양성, 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직접적인 사회·경제적 효과 제고
- ◆ 궁극적으로 고숙련 인적자본의 축적으로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

- ① (근로자의 취업성과 제고) 실업자의 자율·책임을 강화하는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시행으로 실업자의 취업능력 제고
- ② (기업의 생산성 향상) 중소기업 등을 위한 현장중심 능력개발 지원 등으로 생산성 향상
- ③ (훈련시장 경쟁 강화) 훈련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로 훈련기관간 경쟁을 촉진하고 자율적 구조조정 유도

<계량 효과 분석(추정, 한국직업능력개발원)>

- ◆ 기대효과 : '13년까지 국민소득 1.1조원 증가(1인당 국민소득 25달러 증가)
 - * 취업소요기간 단축(4.4개월 → 3.0개월) 효과 : 2,727억원(직능원,08년)
 - * 취업률 제고(63%→73%) 목표 달성 효과 : 2,165억원(직능원,08년)
 - * 소득 증대로 인한 생산유발효과 : 6,311억원(한국은행, '07년)
 - * 임금근로자 평균임금 자료 참고('07년)
- ◆ 계량화가 곤란한 재직자 향상훈련 개선효과까지 포함시 추가적인 소득증대 등 국민경제 기여효과 예상
 - * 훈련참여기업 비중 1% 증가시 1인당 국민소득 298달러 증가 예상
 - '08년 한국노동경제학회 자료 참고<ppp 기준(구매력으로 환산)>

2

실천계획

- ① 시행령 등 법령개정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'09년 하반기까지 완료
 - * 산업별 협의체의 역할 강화, 훈련비용 지원절차 간소화 등
- ② 직업능력개발 신규사업은 '09년 하반기까지 성공 사례를 도출한 후, 단계적으로 확산
 - *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지원사업, 직업능력개발 중심대학 지원사업 등
- ③ 『직업능력개발사업의 체계적 관리 방안』의 차질없는 추진
 - (부처내 유사사업) '09년 하반기까지 자율적으로 통폐합 추진
 - (부처간 유사사업) '09년 하반기부터 중복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우선 평가하여 통폐합 추진
 - 『직업능력개발사업 조정 협의체』에서 사업 평가 및 통폐합에 관한 사항 심의·결정하여 '10년 예산에 반영
 - (중앙정부·지자체 역할 분담) '09년 하반기부터 지자체는 지역 전략산업 중간기술인력 양성에 집중하고
 - 중앙정부는 국가 고용지원서비스체제를 통해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시행에 역점
 - 『직업능력개발사업 조정 협의체』에서 기관간 역할 부분에 관한 세부사항 심의·조정
- ④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등 단계적 추진 사항은 일정계획에 따라 시행
 - * 녹색산업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등의 인력 양성, 중소기업 학습 조직화 한국형 모델 정착 등

붙임 과제별 추진일정

과제명	세부과제	주관(협조)부처	추진일정
훈련참여자의 선택권 강화	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전면 확대	노동부	'10상~
	훈련과정에 대한 규제 완화 등 (관련 규정 개정)	노동부	'10상
	직업훈련기관 평가체계정비 및 평가결과 정보공개 강화(시범운영)	노동부	'10상
	훈련 상담인력 확충 및 연수프로그램 운영	노동부	'10상~
	상담 업무프로세스 설계 및 매뉴얼 작성	노동부	'10상~
	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 강화	노동부	'09하~
	산업계와 지역의 참여 확대	「직업능력개발 지식포털」사이트 구축	노동부
직업훈련 콘텐츠 전자 상거래 지원		노동부	'10상~
SC 관련 지침 제정		노동부 지경부	'09하
SC의 인적자원개발사업 지원 강화		노동부	'09하
녹색산업과 고부가가치산업 등 지역 거점 공공훈련기관 역할 강화		노동부	'09~
정부위탁 우선선정직종훈련 고부가가치 직종(서비스산업) 전환		노동부	'09~
‘대한상의 인력개발원’을 지역별 사업주 단체 주도 운영 체제로 개편(시범실시)		노동부	'09~
노사공동훈련 활성화		노동부	'09~
「직업능력개발 중심대학 사업」 확산		노동부	'09하~

현장중심 능력개발 촉진	현장훈련 요건 완화 및 고용보험 환급 기준 상향 조정(고용보험법령 개정)	노동부	'09하
	현장 문제 해결 '전문 컨설턴트' 양성	노동부 지경부	'10~
	사내 고속연자 현장전문가로 육성	노동부	'10~
	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컨설턴트 육성, "직무역량 제고프로그램" 개발 보급	노동부	'09하~
	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성공 모델 확산 및 훈련결과 평가 강화	노동부	'10~
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체계적 관리	직업능력개발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	노동부	'09하
	직업능력개발평가센터 지정·운영	노동부	'09하~
	직업능력개발사업 조정협의체 운영	관계부처 공동	'09상~
	통합정보관리시스템 등재 및 평가 의무화를 위한 입법화 추진	관계부처 공동	'09하
	HRD-net 등록 훈련기관 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공개	관계부처 공동	'10~
	유사·중복사업 통폐합	관계부처 공동	'09하~
	중앙정부·지자체 역할 분담	관계부처 공동	'09하~
	훈련비용 지원업무 처리를 위한 On-Line 시스템 구축	노동부	'09하
	훈련비용 지원절차 및 처리기간 단축	노동부	'09하
훈련비용 신청 대행 제도 도입	노동부	'09하	
훈련비용 법인카드 결제시스템 도입	노동부	'09하	